

통합 때 지역별 혜택과 불이익 무엇이 있나 질문 쏟아져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청회

“통합하면 우리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시골에 태양광 패널만 잔뜩 깔리는 것 아닙니까?,” “특별시장 직무실은 어디에 둥니까?”

19일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첫 공청회에서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단체장들에게 시민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우려가 쏟아졌다.

통합의 대의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내 삶터와 일터가 겪게 될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영암군 청소년센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에너지 산업’과 ‘농업’의 공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 농민 단체 대표는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키운다는데, 농촌을 파괴하는 난개발식 태양광 사업이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차농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농지를 발전소로 만들면 농민들의 생존 터전이 사라진다”며 농민 희생 없는 통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일반 태양광이 아닌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농사와 발전을 병행, 농가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변했다.

또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제를 통해 발전 수익이 지역민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해 농촌이 더 잘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다.

교육 통합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표출했다.

영암의 한 학부모는 “인프라가 좋은 광주로 학생들이 빠져나가 지역 학교가 더 위축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대중 교육감은 “오히려 전남의 교육 여건을 광주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특성화 교육을 강화해 유학 오는 전남 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통합 명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학산

특별시장 직무실은 어디에?

대도시로 학생들 유출 걱정

협오시설 떠넘기는 것 아니냐

시·도민 기대와 우려 교차

면 농민 임유식씨는 “왜 통합시도 명칭이 광주전남 특별시나, 전남광주특별시라고 해야한다”며 “또 협오시설이 전남으로 밀려들어오는 것도 특별법에 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영암군 덕진면 한 마을 주민은 “마을 주민들은 통합으로 우리 마을에 무엇이 좋아질까 의문일 것”이라며 “가장 필요한 예산으로, 낙후지역에 균형발전기금 지급 기간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행정통합은 곧 문화통합이라며 국립민속박물관의 전남 유치와 광주비엔날레와 전남수목비엔날레의 통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같은 날 오후 광주시 동구청에서 열린 공청회장 분위기도 뜨거웠다. ‘교육 자치 훼손’과 ‘협수 통합’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자신을 학부모이자 교육청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참석자는 “행정통합 논리에 밀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교육은 통합이 아닌 보호의 대상”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특별법에 교육 자치 보장을 명문화하고,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통합 청사의 위치와 명칭 문제는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였다.

“통합 시장이 어디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의 축이 기울어질 수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9일 영암청소년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에서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남광주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옛 전남도청과 전일빌딩 등을 활용해 동구 원도심을 행정·문화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강기정 시장은 “청사 위치 논쟁이 통합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며 “현재의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되, 핵심 부서 배치는 추후 시민의 뜻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협오 시설 배치’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영암의 한 주민은 “통합 후 광주의 기피 시설을 전남으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영록 지사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기피 시설 유치 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로 유치하고 싶어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통합 시 기초지자체의 권한 축소 우려”, “공무원들의 강제 인사 이동 불안”, “구체적인 주민 제감 혜택 부족” 등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주민은 “너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

니냐”며 충분한 숙의 과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양 시도 단체장은 이날 쏟아진 질문들에 대해 “모든 불이익은 배제하고, 국가는 더 특별하게 지원한다는 것이 통합의 대원칙”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로부터 받아낼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각종 특례 권한을 통해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특색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행정통합 대응 조직개편·정원 증원안 시의회서 ‘제동’

“의회 사무처에 4급직 자리 달라”

광주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군 공항 이전 등 핵심 현안 대응을 위해 추진중인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 문턱에서 멈춰 섰다.

시의회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과 이를 뒷받침할 실무 인력 보강이 빠졌다”며 제동을 걸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제340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들은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으며, 오는 2월 2일 본회의 이전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준비를 위한 ‘광주전남행정통합실무준비단’ 신설과 군 공항 이전 및 도시 개발을 전담할 ‘통합공항미래

도시본부’ 개편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통합 실무 인력 14명을 포함해 총 38명의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집행부 중심의 인력 증원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행부가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을 주도하면서 38명이라는 대규모 인력을 총원하는 동안, 통합의회의 청사진을 그리고 견제 기능을 수행할 의회 차원의 인력 보강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이다.

광주시의회 한 행자위원은 “38명 증원 중 14명이 통합 준비단으로 가는데, 통합의회를 준비할 의회 측 인력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며 “집행부만의 의지가 아니라 의회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밑에서는 의회 사무처 내 4급(서기관) 정원 확보 문제를 두고 집행부와 의회 간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 측은 통합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4급직 추가 등을 요구했으나, 시가

답답을 주지 않은 채 조련한 통과를 서두르자 ‘보류’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행정통합 논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도 보류 결정의 배경이 됐다.

안평한 행정자치위원장은 “국가적 아젠다이자 지역의 미래를 바꿀 메가톤급 사안임에도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며 “전남도의회 상황과 특별법 추진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행정통합 관련 인력 1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이 다른 실무국에 배정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안 위원장은 “통합의 큰 흐름에는 변함이 없다”며 “남은 기간 집행부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회 인력 증원 문제 등을 조율하고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전직 광주 지방의원들 행정통합 공식 지지

“지역 소멸 극복위한 시대적 결단”

전 광주시의원과 구의원들이 광주·전남 통합 추진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다.

전 광주 시·구의원들은 19일 광주시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전 시·구의원 105명 명의로 발표했다.

이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 부응하는 핵심 과제”라며 “지역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넘어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통합 추진이 타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균형발전 의지와 더불어민주당의 제도적 지원, 강기정 광주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정치적 결단을 꼽았다. 민주당이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극 3특 균형성장 지원단’을 구성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강 시장과 김 지사의 통합 추진 결단에 대해 “광주·전남의 백년대계를 위한 대승적 선택”이라며 “1986년 분리 이후 이어진 행정·경제적 단절을 극복하고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춘 생존 전략”이라며 “통합 광주·전남이 남부권 핵심 성장축으로 도약해 미래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은 시·도의회에 “신속하고 책임 있는 논의로 시·도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교육발전특구×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고교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및 지역특화 인재를 육성합니다!



광주보건대학교

고교와 함께, 지역을 넘어 세계로! 보건의 내일을 여는 글로벌 대학



기독교간호대학
CHRISTIAN COLLEGE OF NURSING

실무능력이 우수한 글로벌 기독교간호인재 양성 대학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미래를 여는 한 걸음! 대학과 함께하는 진로 탐색



동강대학교
DONGGANG UNIVERSITY

특성화고 진로, 동강대에서 키워 지역 정주로 완성하다



서영대학교
SEYOONG UNIVERSITY

고교와 대학을 잇다, 서영대가 만드는 미래형 인재의 길



조선간호대학교
CHOSUN NURSING COLLEGE

나의 간호 꿈, 고교에서 미리 준비하고 조선간호대학교에서 완성해요



조신이공대학교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빛고를 미래인재 양성 통합 직업교육



한국폴리텍대학

미래 기술인재, 고교에서부터 키웁니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광주RISE센터
GWANGJU RISE CENTER